의안 번호	134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원 유치 촉구 건의안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원 유치 촉구 건의안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

발의연월일 : 2026. 10. 26.

발 의 의 원 : 이정희・강창석・백승규・심임숙・오춘근・진형익・차중현・홍용채・황점복(9명)

1. 제안 이유

❍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제시한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원칙은 혁신도시 집적 효과를 높일 수는 있겠으나 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비혁신도시가 배제될 우려가 있음

❍ 이는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 간 연계 가능성을 제한하여 지방이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 이에 국가 핵심산업의 집적지이자 다수 대학의 소재지인 창원시를 이전 대상지로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함.

2. 주요 내용

❍ 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산업 기반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이전을 실행할 것을 건의함

❍ 창원시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 이전 대상지로 검토할 것을 건의함

❍ 창원시 주력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창원 이전을 건의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경상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창원 유치 촉구 건의문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능을 분산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그러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반쪽 이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단순 소재지 이전을 넘어 지역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전 전략이 필요하다.

2026년 9월,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연계,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 원칙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원칙이 실질적인 이전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산업 간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지역의 산업적 강점과 결합하고, 대학·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할 때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원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 대상지로 적합하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계, 방산, 원전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이다.

또한, 국립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마산대학교 등 지역 대학을 기반으로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같은 창원시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나아가 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차원을 넘어,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적 강점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의 물리적 분산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경제와 일자리로 확산될 때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창원시는 국가 핵심 산업의 집적지이자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갖춘 도시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전 최적지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창원시의 산업적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산업 기반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핵심 산업의 집적지이자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갖춘 창원시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 대상지로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창원시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연구개발·기술평가·기업지원 분야 공공기관의 창원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

2026년 10월 30일

창 원 시 의 회